

社說

표류하는 '대학정신'의 방향을 찾자 — 대학문화의 위기와 대학인의 사명

요즘 대학가는 표면적으로 꽤 안정되어 보이고 가을의 운치에 푹 젖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같은 외양적 평온의 표피를 걷고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 보면 많은 격랑의 변화가 흐르고 있음을 곧 감지할 수 있다.

우선 졸업을 앞둔 예정자들은 취업에 대한 정신없이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해년의 학회활동을 운영할 책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준비가 한창이다. 경합하여 각과의 학회활동이 활성화되어 발표와 답사, 전사회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당국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교수채용문제에 부심하고 각동아리들은 연극영화상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같이 활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허무주의와 좌절감, 그리고 감각문화와 편의주의적 분위기가 넓게 깔려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가득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입에서 대학입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꾀를 쏟으며 바친 정진,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강의실에서 도서관의 학문과 지리를 찾아 몸부림쳤던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학생도 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데 사회는 마치 무엇이나 잘 되어 가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 자동차로 메꾸어지는 거리며, 빌딩으로 가득 채워지는 서울거리, 모두 다 화려해져만 보이는 옷차림에 비해 한없이 왜소해 가만히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취업의 길은 점점 좁아만 간다. 자본과 인맥과 가진자의 논리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서 정의나 진실이나 희생이나 사랑이라는 말은 마치

조소나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이상이 강렬하면 할수록 젊은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보이지 않는 허무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더구나 대학문화는 화려한 감각과 일차적 욕구충족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대학가에 일어나는 화려한 상가 건물, 외국상품의 간이음식점, 책방 대신에 들어선 화려한 의상실과 수도 없이 늘어나는 호프집과 카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른바 부대끼는 정신들이 행하는 파괴적 충동구매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너와 나, 그리고 전 사회의 무관심이다. 아주 큰일이 터져도 일회성 사건으로 취급되고,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시비를 가리기 전에, 양비양시론적 논리로 현실을 모면하고 누구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도 정치인도 종교인, 법조인, 사회지도자 어느 누구도 자기 기득권의 그늘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려 하지 않으며, 다만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뿐이다. 희생과 공존, 그리고 더불어 삶과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와 학생운동의 방향, 대학문화의 현주소가 변화 속에 아직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곳곳에서 증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그 해결점을 역사에서 찾아야겠다. 투철한 시대감각과 먼 곳을 바라보는 역사적식을 통해 오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인류의 비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이일을 위해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젊음의 현장에서 기다림과 도전,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토론과 도전과 연구와 행동이 있어야겠다.

제도언론은 부와 권력의 시녀인가 — 또다시 폭로된 기자 촌지 사태를 보며

지난주 보사부기자단의 거액촌지 사건이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의 촌지파동이나 비리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면에 가려져 덮여왔던 일련의 사건들이 이시대의 '양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내고 있다.

최근 전국민을 분노케한 '수서특혜'에 대한 보도에서 기자들이 한보축의 촌지를 건네 받음으로써 '누가 더 큰 범죄자'인 여론의 시비에 울랐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자한 시기행각, 언론인들의, 크고작은 비리 등은 감지 않은 한국언론사에서 개인의 처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길을 갔던 언론인들의 사명식에 비해 부끄러운 행태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자정운동 실천을 위한 모색' 토론회를 통해 언론사 기자들 내부에서 자정(自淨)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언론사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언론사 스스로의 뼈아픈 반성의 노력과 체질개선이 없이는 어려운 문제가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 KBS 부정과 평화방송 노조사태, 그리고 얼마전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사퇴 등은 권력과 자본 뿐 아니라 언론의 구조적인 모순에 맞서 투쟁한 기자들의 행동이 돋보였다.

언론은 어떠한 간섭과 통제, 탄압에도 지배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아직까지도 '보도직'의 압력, 언론사 내부의 권력유착형 간담회

들이 행하는 요즘 좋은 본보기가 되고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언론이 자칭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권력과 독점자본에 유착되어가는 현실을 보며 이방민중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언론은 진정한 시 태어나야 한다. 근래들어 언론인들에서 언론권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양시양 비론적 보도태도가 일제 모르게 정권과 자본가의 이데올로기 지배에 일조하고 있는만큼 이를 극복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마당에 공인(公人)으로서 정치·사회전반에 걸쳐 가장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할 언론인들이 자신의 신분과 가시적인 지위를 악용해 권력과 부를 쫓는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권력과 독점자본이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유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은 기득권과 권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야 할 위치와 현실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민중의 입장에서 현실을 분석,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파급성을 가져야 한다.

이제 제도권언론은 풀려진 내부의 비리를 벗어던지고 민중기자로서의 실천의식과 현실변혁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방의 진정한 주인이 민중이라면 언론도 가진자들의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한 '영부세' 역할을 청산하고 민중을 위한 선전과 조직화에 힘써야 할 역사적 필연성을 획득해야 한다.

'선거인플레' 최소화, 자치단체 장 선거 연기 검토'(경향 11월 1일), '선거법 중간점검'(한겨레 10월 30일), '불법선거운동 사례 적발, 민자당 돈공세'(한겨레 11월 1일).

아직 수개월 뒤에 있을 선거 이야기가 요즘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내년의 선거중 하나인 대통령선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은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중요한 선거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여-야는 하나의 선거사안을 갖고도 첨예한 대립과 대결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일간지는 선거법협상과 관련 금권·관연에 의한

타락선거가 예상되고 있어 잔혹 쟁투된 경계에 주춤할 것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내년 선거를 계기로 엄청난 돈이 유출되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경제위기론'과 '선거법공론'을 구실로 한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있다. 경향신문의 경우 10월 31일 머릿기

재조정을 반대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법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일간지들은 '경제위기를'과 '선거법공론'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선거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무마시킴으로써 결국 집권층의 의도에 동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자기의 당락을 위해 온갖 수단을 쓴다해도, 언론매체들이 기득권의 옷을 벗고 민중의 편에 섰다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 또한 현재 언론들이 해야 할 바이다.

(송보영 記者)



선거일정 연기에 동조하는 언론보도

사과 해설에서 김우중회장의 말을 빌려 "내년의 있다면 선거가 일정조정없이 강행될 경우 기업에 포함할 경제계가 휘청거릴 것"이라며 "경제가 경제를 망친다"라는 극단론까지 펴고 있다.

같은 주장의 글이, 10월 31일자 경향신문 칼럼, 조선일보 사설, 11월 1일자 서울신문, 경향신문 사설에도 실려 약 5-6조원이 쓰이게 될 선거를 경제적 사정의 이유로 뒤로 미룰것을 주장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야당이 많이 당선된다면 행정관료들을 대통령선거에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날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당리당리에 근거하는 선거

과소비 민초는 흥내 못낼 가진자의 '풍조'

— 과소비 억제운동의 실체와 미국의 개방 압력



현시기 우리는 과소비 추방 캠페인을 자주 접하게 된다. 거리의 현수막에서, 그리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특집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과소비를 추방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당장 '파산'할 것처럼 보인다.

문짜, 벽지, 욕조까지 동원된 수십 억원짜리 빌라 건축시사는 우리의 과소비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을 보면 한편에서는 쓸쓸한 '뒤통'을 감출 수 없다.

과연 이렇게 돈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분명 그들은 주체할 수

는 집값, 전세값을 감당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층이나, 생생 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쌀값으로 살아가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과소비해탈과 과소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들어 대고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저지할 것인지도 의문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가 마구 쌓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수입개방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수입도 정도껏 잘해야 한다고 선전,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누구나 보고 있듯이 외제 전자제품이 지천에 깔려 있고 바나나가 할값에 팔리다 못해 썩어서 내버려지고 있는

경제 위기속 사치성 수입품 규제 절실 캠페인, 가진 자의 무절제에 초점 맞춰야

경제현실에 비추어 불태 과소비 추방은 백년 유년 말이다. 한 발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옷이 버젓이 팔리고, 호화 사치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외제 싱크대,

없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과소비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다. 아무리 평범 높아도 대책없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주 많은 양반들에게 쓰지 말라고 외쳐댄들 어디 써달이나 못할 것인가?

고향만경 민 학기



이 운동이 한편에서는 오늘의 경제 문제를 은연중에 과소비라는 것으로 얼버무리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이다. 지금 사회 각계에서는 한국 경제를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기업에서는 자금이 '말라' 야단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은 잇달아 도산하고, 물가는 허파가 뜨겁게 뛰고, 수출은 안보인데 수입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경제위기라고 진단한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

몇 해전 한국 경제는 유사 이래 없었던 흑자부역 경기를 누리 바 있었다. 이 때 정부는 수출이 너무 많이 되어 큰일이라고 했다.

그 뿐인가? 외국 은행이 오랜 기다림 끝에 국내 은행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고, 내년 1월부터는 증권시장도 개방되어 외국 의 큰 손이 남는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동태 구멍가게는 영어로 된 간판에 밀려나고 있다.

수입개방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던 쌀시장이 무너져 무너져 라운드 협상의 타격을 묵묵히 받고 개방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과소비추방을 우리가 순수한 뜻에서 받아들인다 해도 우선은 이 사태를 유도한 현경제 팀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비평에서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계몽운동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과소비 추방운동을 펴고 있다"고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치생활자를 가려내기 위해 한국은행이 각 신용카드회사에 자기타이프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사생활 침해'이며 한편에서는 수입 억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강력

진 7%에서 쌀값을 책정했다. 반면에 정부의 새해 예산은 지난 해보다 2%나 증액해 놓았다. 정부의 공식통계를 따르다 해도 9월 말까지의 물가상승은 8.9%에 이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물가는 절박해야 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는 당연히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국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의 70%에 달하고 볼로소득이 GNP의 90%에 육박 할 만큼 부가 투기화되어 있는 한, 가진자들의 돈은 끝없는 소비 욕구로 나아갈 것이고, 또 소비를 충족시켜줄 시장이 활짝 열려 있는 한, 과소비추방운동은 한갓 소구에 경 위기에 불과할 것이다. 정말로 과소비를 막으려는 의사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사치성 물자의 수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며, 비탈길에 사로잡혀 있는 절대 다수 민중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부의 정당한 분배에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안 재 훈
(민중민주운동연구소·연구원)

POSCO 메세지 7면화면



날알 하나에 땀 한방울

초봄, 어린 모판에서 조심스럽게 가꾸 한 포기 한 포기를 줄 맞춰 심고, 물 조절에 하늘 쳐다보며 날씨 걱정, 유월 땀방에 가뭄일까, 장마태풍에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에 설 틈 없었던 농부.

병충해 입을까 약뿌리고 잡초 뽑아가며 자식 다루듯이 곱게 곱게 기른 벼이삭.

이제, 다 자라서 고개 숙일 줄 아는 벼는 농부의 손길이 몇 번 스쳤으며 흘린 땀은 얼마나 될까?

'뿌린만큼 거둔다'합니다.

자기가 거둔 수확을 위해 얼마의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